국토정책Brief는 주요 국토정책 현안을 적시하고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주간지입니다.

2018/3·5

국토정책 Brief
KRIHS ISSUE PAPER

KRIHS POLICY BRIEF • No. 654

발행처 | 국토연구원 • 발행인 | 김동주 • www.krihs.re.kr

소비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성장 제고방안

남기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요 약

❶ 생산위주-공급중심의 지역경제성장 전략이 소비위주-수요중심의 전략으로 전환 중

– 자국우선주의, 대외 불확실성의 증가 등으로 인해 국내외 성장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소득-소비-경제성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목표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 중

❷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소비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지역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

– 소비활성화는 소비가 발생되는 공간인 '소비시장'(consumption market) 활성화와 결부되며, 이는 지역에 따라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소득주도성장의 적용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역차원의 가능성 및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❸ 소득주도성장 추진은 지역별로 차별적인 효과를 나타냄

– 최근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을 살펴보면, 민간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은 여전히 이로 인한 지역경제성장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순이출 비중이 높았던 지역은 지역경제성장의 추세가 다소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남

– 소득증대를 통한 소비증대-지역경제성장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정책수단 및 지역에 따라 그 정도가 차별적으로 나타남

정책방안

① (패러다임 전환) 지역경제성장의 구조적 전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역차원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적용할 가능성 심층 논의 필요

② (거점소비시장 육성 및 활성화) 대도시 등 거점소비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시장을 위계화하고, 주변지역에 다양한 재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권역화하는 이른바 '소비권' 구성 검토

③ (지역 소비자원의 발굴) 생산기반이 취약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특색 있는 인문·사회·자연 등 자원을 발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1. 소득주도성장의 배경 및 역할

국가차원의 경제성장 방식으로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필요성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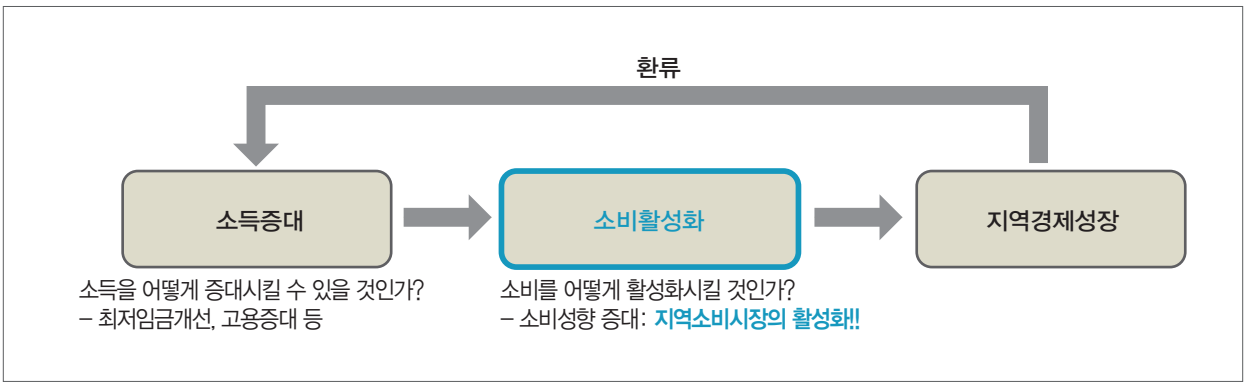
문재인 정부는 주요 경제성장전략으로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을 천명

◦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zing Economics: NIEs)으로서 수출주도형 성장방식(Export-led Growth)을 추진하였으나, 2000년 이후 국내외 투자 및 일자리 감소 등 저성장기조의 고착화 현상으로 인해 성장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

◦ 이에 따라 현 정부는 경제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을 제시

– 소득주도성장 전략은 소득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소득증대→소비증대→지역경제 활성화) 구축에 있음

그림 1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 체계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소비활성화에 있으며, 이에 대한 지역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수적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소득증대'보다 '소비활성화'에 있음

◦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소득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인가'보다 '소비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있음

– 소득증대가 소비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 소득주도성장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음

소비활성화는 지역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이슈임

◦ 소비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소비자의 소비성향(Marginal Propensity to Consume: MPC)을 반영한 정책개입 필요

◦ 이와 더불어 지역 소비자의 소비성향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구조화된 '소비시장'(Consumption Market)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안 모색이 필요

2. 지역경제 성장동력으로서 소비부문의 역할

소비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점차 증대

○ '00~'15년간 각 지출부문의 경제성장 기여율을 살펴보면 소비부문이 약 40%의 기여율을 보여 지출부문 중 가장 높은 기여율을 보였으며, '00~'15년간 변동계수의 경우 정부지출부문을 제외하고는 민간소비지출 부문이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2 국가경제성장에 대한 지출부문의 기여율('00~'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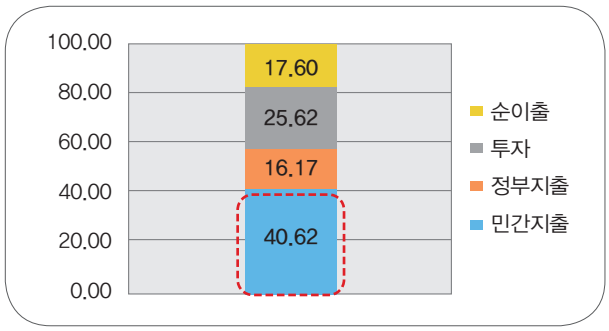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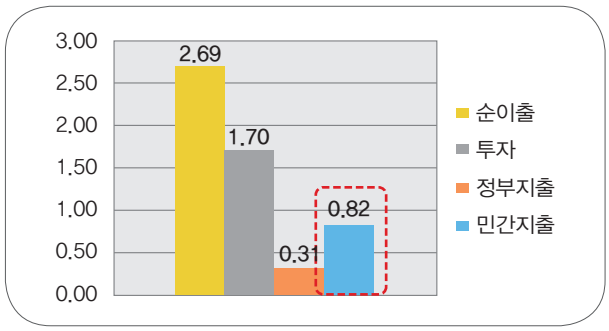


그림 3 국가경제성장 기여율의 변동계수('00~'15)



지역단위에서 경제성장 동력에 대한 구조적 변화 양상 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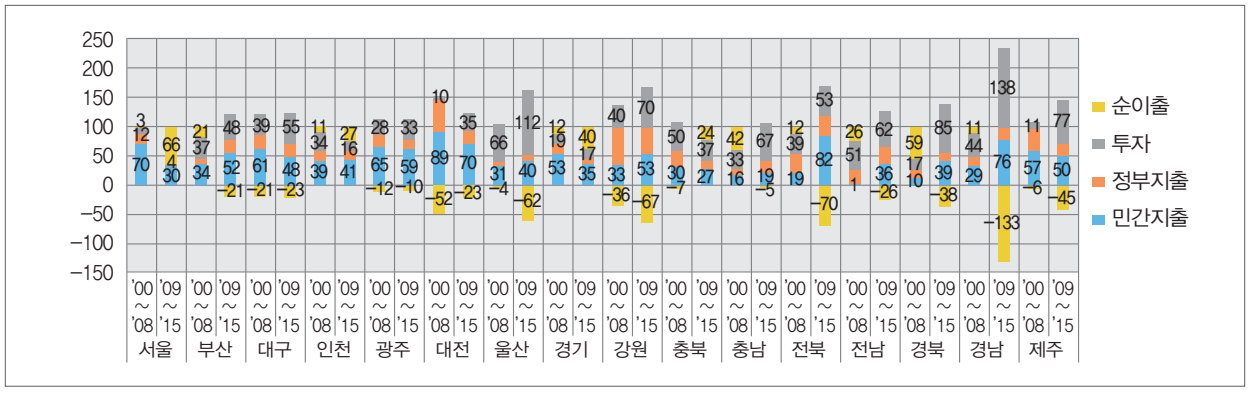
○ 과거 민간지출 비중이 높은 대구, 대전, 광주 등은 민간지출로 인한 지역경제성장 기여율이 '00~'08년에 비해 '09~'15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기여율을 보이고 있음

○ 순이출 비중이 높은 울산 등의 경우, '00년 이후 순이출에 의한 경제성장 기여율은 음(–)의 방향을 보이는 반면, 민간소비에 의한 경제성장 기여율은 점차 증가하는 패턴이 나타남

*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민간지출 기여율 증대지역: 부산,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순이출 기여율 증대지역: 서울, 인천, 대전, 경기

그림 4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지출부문의 기여율('00~'1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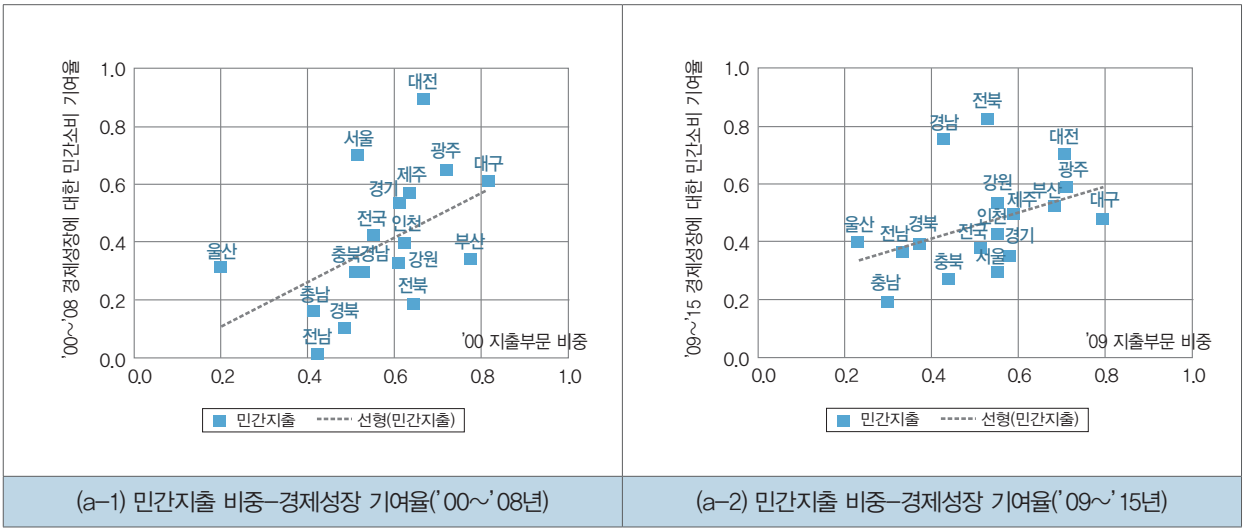
4

소비부문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안정적인 반면, 순이출의 경제성장 기여율은 감소하는 추세

'00년 이후 지역경제에서 민간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민간지출을 지역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 중이나, 순이출 비중이 높은 지역은 지역경제성장에서 순이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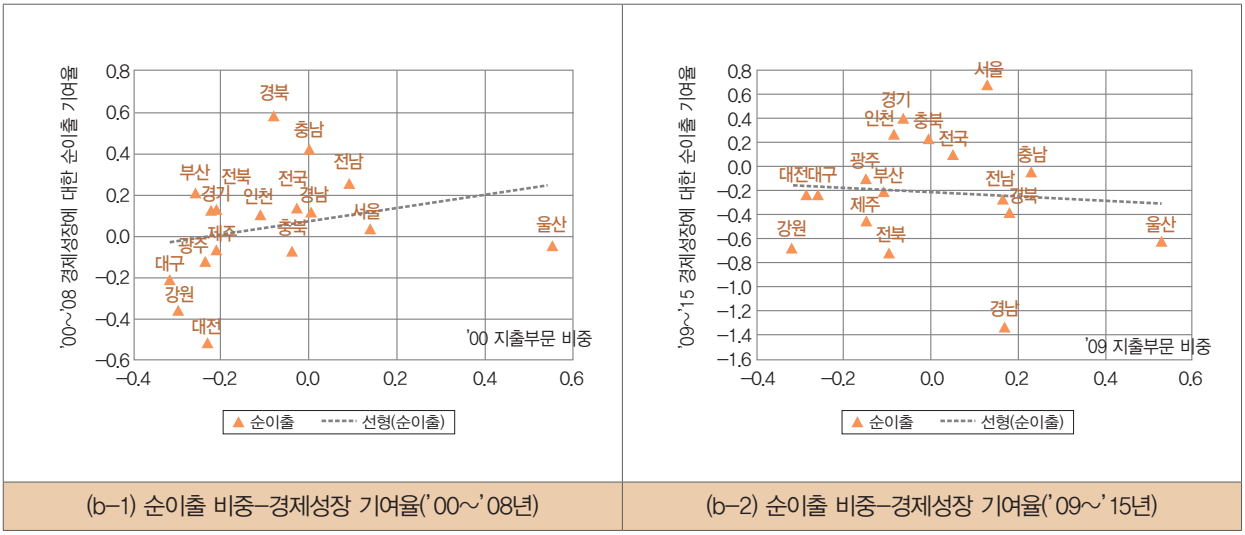
- 2000년 이후 경제성장에 대한 지출부문의 기여율을 보면, '00~'08년간의 경우 민간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은 민간지출로 인한 지역경제성장이 높고, 순이출 비중이 높은 지역은 순이출로 인한 지역경제성장이 높은 형태로 나타남
- 반면, '09~'15년간의 성장기여율을 살펴보면, 민간지출 비중이 높은 지역은 여전히 민간지출로 인한 지역경제성장이 높게 나타나지만, 순이출 비중이 높았던 지역은 순이출로 인한 지역경제성장의 추세가 낮아지는 양상을 보임

그림 5 지출비중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과의 관계



(a-1) 민간지출 비중-경제성장 기여율('00~'08년)

(a-2) 민간지출 비중-경제성장 기여율('09~'15년)



(b-1) 순이출 비중-경제성장 기여율('00~'08년)

(b-2) 순이출 비중-경제성장 기여율('09~'15년)

3. 소비와 지역경제성장의 선순환 체계

최근 소비가 경제성장 및 이출입을 견인

◦ 소비, 이출입과 경제성장에 대한 실증모형을 구축하여 패널 그랜저 인과관계검정(Panel Granger Causality Test)을 수행한 결과 2000~2008년간의 경우 경제성장이 소비 및 이출입을 견인하는 '성장견인형 내수증대'(Growth-led Export), '성장견인형 수출증대'(Growth-led Demestic Demand)의 방식이 유의하게 나타남

◦ 반면, 2009~2015년간의 분석결과 소비의 역할이 부각되는 '소비견인형 성장증대'(Consumption-led Growth), '소비견인형 수출증대'(Consumption-led Export)의 형태를 보임

– 이는 과거에는 국가 및 지역이 성장함에 따라 소비 및 이출입이 증대되어왔던 구조였던 반면, 최근에는 소비가 증대하면서 경제성장 및 이출입이 증가되는 경제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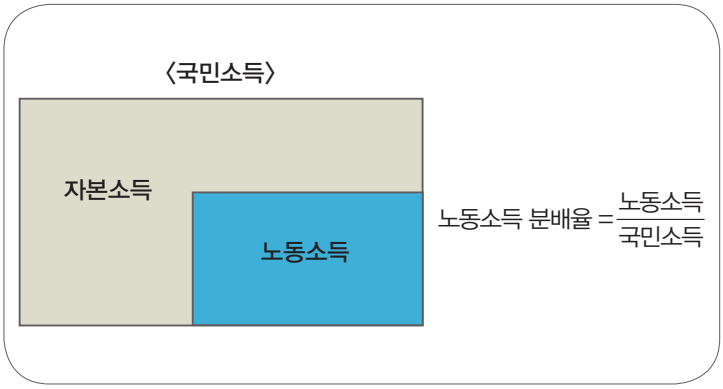
그림 6 소비, 이출입,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

지역소비 활성화에 대한 소득증대 효과는 유의미하나, 정책수단 및 지역에 따라 그 정도는 차별적으로 나타남

◦ 노동소득분배율 향상이 소비를 증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시·도 단위의 분석을 수행한 결과 총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지역의 소비가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남

– 노동소득분배율은 국민소득 중 노동소득의 비중을 의미하며, 노동소득분배율의 증대는 전체 국민소득 중 노동자의 몫인 노동소득의 비율을 증대시키는 것을 의미

그림 7 노동소득분배율의 개념



◦ 개별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소득증대의 효과 유무 및 정도의 차이가 존재

◦ 소득증대를 통한 경제성장의 효과가 유의미한 지역은 특·광역시인 서울, 부산, 인천, 대전, 울산과 수도권과 인접한 충북 등이며, 그 효과의 크기 또한 대전, 서울, 울산 순으로 차별적으로 나타남

◦ 반면, 소득증대로 인한 선순환의 효과가 감지되지 않는 지역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지역의 경우 소득향상이 지역의 경제성장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지역으로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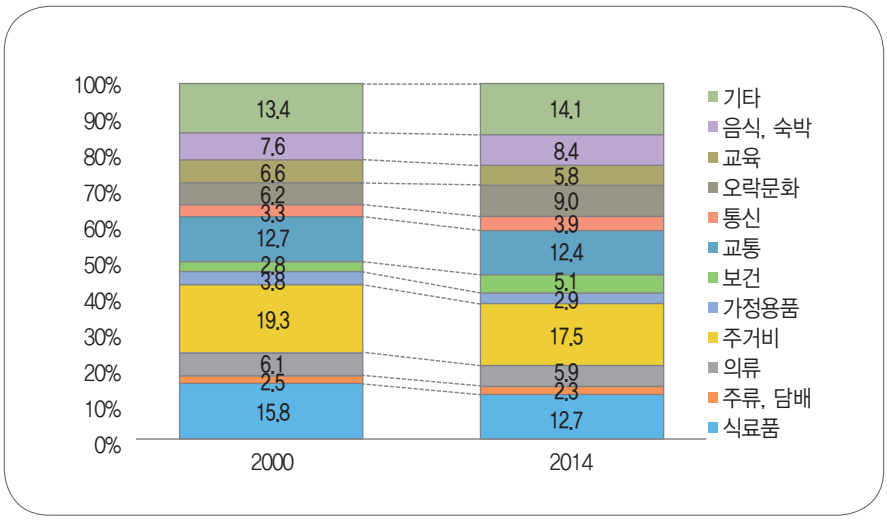
4. 지역의 소비구조 및 소비중심성

지역정책으로 활용 가능한 소비부문 검토

◦ '00~'14년간 소비구조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비교적 필수재로 구분되는 의·식·주부문은 감소하는 한편, 보건, 오락·문화, 음식·숙박 등의 부문은 증가추세를 보임

◦ 특히, 쇼핑, 오락·문화 등 소비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지역화할 수 있는 관광대책 등이 필요

그림 8 소비구조의 변화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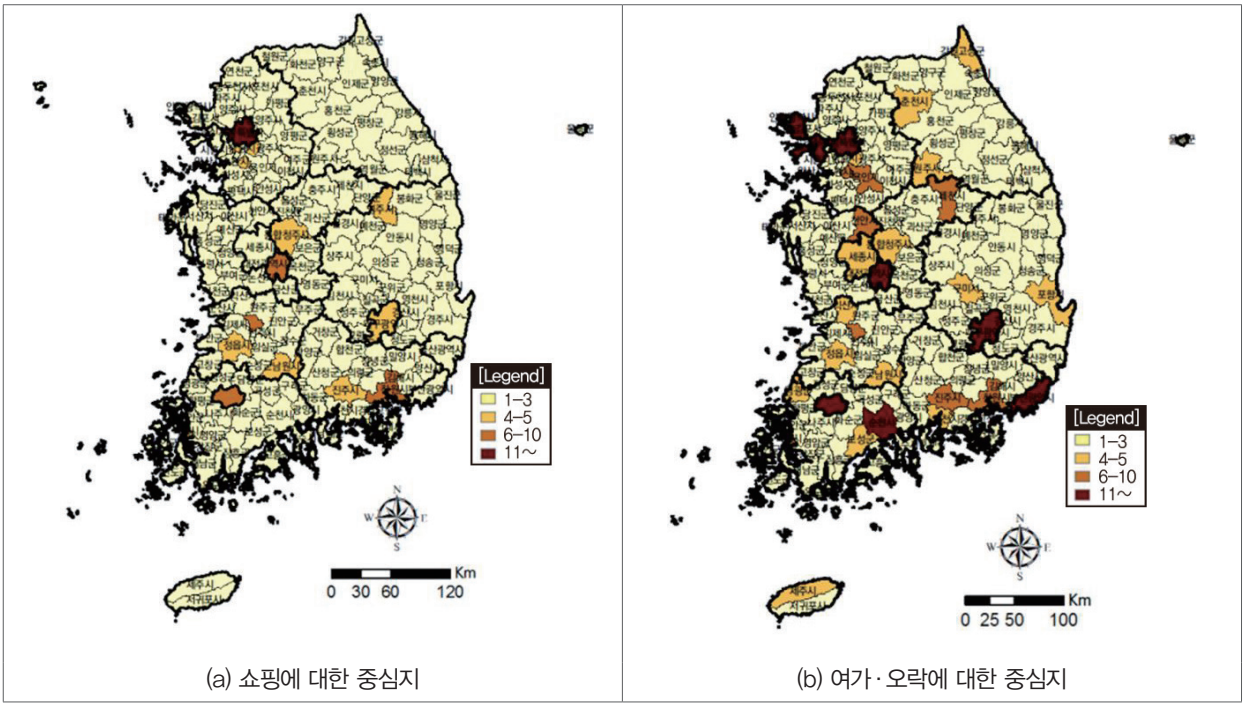
소비중심성

◦ 소비의 주체인 소비자가 어떻게 집중하는지에 대한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KTDB의 쇼핑 및 여가·오락통행에 대한 연결중심성(Degree of Centrality)을 분석함

◦ 쇼핑통행의 경우 특·광역시를 비롯한 일부 대규모 도시의 중심성만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여가·오락통행의 경우 특·광역시뿐 아니라, 다수 지역의 중심성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이는 쇼핑 등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여 대도시 위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육성이 필요함을 지적할 수 있으나, 여가·오락의 경우 특색 있는 지역의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거점화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

그림 9 쇼핑 및 여가·오락통행에 대한 중심성 분석결과



(a) 쇼핑에 대한 중심지

(b) 여가·오락에 대한 중심지

5. 정책적 시사점

소득주도성장 패러다임 및 지역경제성장 동력의 구조적 전환에 대한 이해 필요

◦ 소득주도성장은 필연적으로 지역의 소비시장과 연계됨을 이해할 필요
– 소비의 주체는 소비자인 사람이며, 소비행동의 양식은 소비자가 소비의 공간, 즉 소비시장으로의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의 메커니즘에 있어서는 소비공간인 지역소비시장의 역할이 중요

◦ 지역경제의 안정성장 기제로서 소비지출을 인식할 필요
– 2000년 이후 민간소비가 지역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안정적인 기여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지역이 소비주도형 성장전략을 활용하는 경우, 국내외 경제적 불안정성에 대비할 수 있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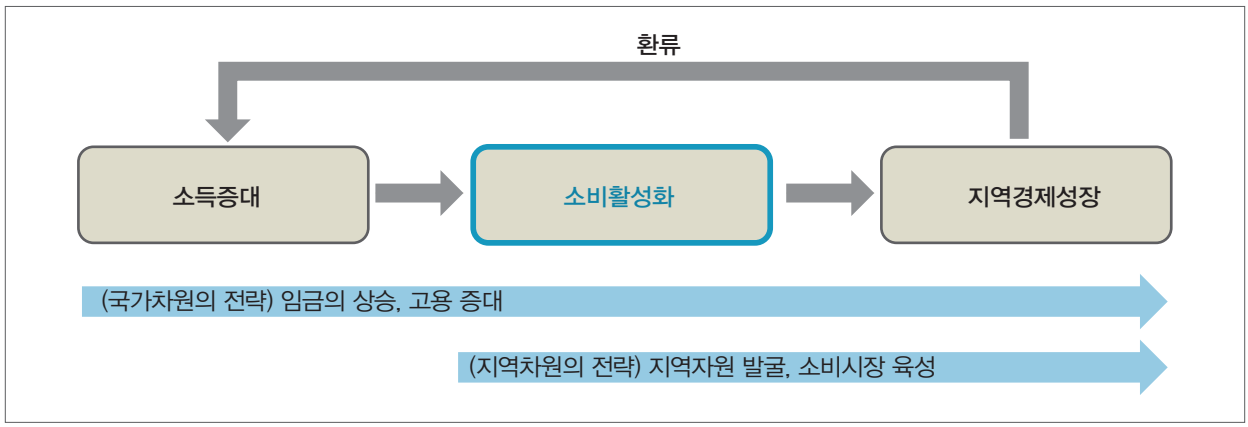
소득주도성장에 있어서의 지역차원의 차별적 적용가능성에 주목 필요

◦ 소득주도성장의 지역적 효과는 지역이 가지는 여건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획일적 적용보다는 지역차원의 면밀한 효과 검토가 필요

◦ 소득주도성장은 지역별 소득 및 소비구조, 지역시장여건, 고용구조 등 상이한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지역차원의 적용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세심한 적용 필요
* 지역단위의 기본소득제도, 쇼핑바우처 제공 등 제도 검토

◦ 소득증대의 정책수단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지역의 경우 소득–소비–경제성장의 순환체계상에서 소득증대보다 지역차원의 소비자원 발굴 등 '소비활성화'에 더욱 집중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그림 10 소득주도성장 체계에서의 국가 및 지역차원의 전략



8

소비부문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소득–소비–지역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의 차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지역소비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소비권 구성) 상품의 이동에 따라 형성되는 소매시장의 경우 다수의 소비자를 집중시킬 수 있는 규모를 가진 대도시 등 거점소비시장을 중심으로 소비시장을 위계화하고, 주변지역에 다양한 재화를 공급할 수 있도록 권역화하는 이른바 '소비권'(Region of Consumption) 형성 등 검토

◦ (지역소비자원의 발굴) 생산기반이 취약한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인문·사회·자연 등 특색 있는 자원을 발굴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 본 자료는 "남기찬 외. 2017. 지역의 소비구조 탐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을 정리한 것임.

남기찬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책임연구원(kcnam@krihs.re.kr, 044-960-0244)

KRIHS 국토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화 044-960-0114
홈페이지 www.krihs.re.kr
팩스 044-211-4760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